

전남대·조선대 취업률 높이기

‘공학인증제’ 본격 추진

삼성전자 ‘가산점 최대 10%’ 이후 관심 높아져

전남대와 조선대가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공학인증제’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공학교육 인증 평가를 신청해 평가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전남대는 오는 2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는 각각 4월과 5월로 예정돼 있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서면심사와 방문 실사평가가 순조롭게 끝날 경우 내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를 본

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08학년도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대가 주진 중인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산업공학과와 건축학 전공을 제외한 건축공학·기구시스템공학·토목공학·환경공학·신소재공학·

기계시스템공학·전자공학·컴퓨터공학·응용화학공학·전기공학 전공 프

로그램 등 10개다.

조선대도 오는 7월께 평가대학으로 선정되면 2008년 자체평가보고서 접수·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서면 및 방문실사 평가 등을 거쳐 2009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09년 4월에는 2단계로 14개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공학교육

인증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4개

운영하기로 하고 1단계로 오는 4월 8

개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신

청할 계획이다. 8개 전공 프로그램은

기계공학·기계설계공학·메카트로닉

스공학·금속재료공학·신소재공학·

응용화학소재공학·광기술공학·건축

공학 등이다.

조선대는 오는 7월께 평가대학으로 선정되면 2008년 자체평가보고서 접수·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서면 및 방문실사 평가 등을 거쳐 2009년 본

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09년 4월에는 2단계로 14개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공학교육

인증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4개

▲공학교육인증제 =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정한 교육목표와 기준, 세부지침 등에 따른 공학교육을 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ABEEK 인증서를 수여, 학생 개인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국제 공학교육에 대한 공인기구인 워싱턴아코드(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국(signatory member)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공학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세계도처에 취업할 수 있는 통

로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학교육인증서를 받은 학생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취업, 유학 등이 훨씬 수월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용 후 투입해야 하는 재교육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해 2월 3급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지원자에 대해 면접 때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힌 후 각 대학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전공 프로그램은 공과대학의 토폭공학·전기공학·자원공학·생명화학공학·환경공학·산업공학·항공우주공학·선플류양공학·원자력공학 등 9개와 전자정보공과대학의 전자공학·정보통신공학·제어계측전공·컴퓨터공학·인터넷소프트웨어공학 등 5개다.

조선대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학교

육 혁신과 장차 지식산업사회에서 선

도적 역할을 할 ‘현장중심형’ 창조적인

엔지니어를 배출하기 위해 공학교육

인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산업체의 수요에 맞춰 인재를 적시에 공급 할 수 있어 학생 취업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대총기자 hwangtae@kwangju.co.kr



CMB 광주·전남방송 신사옥 착공

CMB 광주·전남방송 신사옥 착공식이 2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맞은편 부지에서 열렸다. 을 연말 완공

될 CMB 신사옥은 연면적 7천 174㎡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디지털방송 시대에 맞춰 최첨단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 CMB는 전국 12개 케이블 방송사를 소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서, 이 지역에서는 광주 38만 가구와 나주·곡성·화순·담양·장성·구례·보성·영광·함평 등 9개 시·군 12만 가구에 케이블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내용주기자 mjna@kwangju.co.kr

세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국부 관계자는 “유급자들은 3월 새 학기에 학교로 복귀해 부족한 학점을 보충해야만 입증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특별편입생은 1990년 ‘국립사대 출생 우선 제용’ 위험 결정으로 당시 입증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교육부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 1월 특별법을 제정해 나이 제한 없이 중등 입증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특별편입해 초등 입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졌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미입용자 600명이 10개 교대에 특별편입했지만 이들은 초등교사 입증시 별도 정원을 확보해 특별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한국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

이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째는 만큼 투기 등에 의한 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열

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시보에 공고

등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3년이며

주거(180㎡)와 상업(200㎡) 등 용도

에 따라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거

래할 경우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제작기자 chae@kwangju.co.kr

한국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

이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의 적절

성 등을 철저히 째는 만큼 투기 등에

의한 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개발정보

사전유출에 따른 토지거래 상승, 부

동산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우려

해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지구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고려대 교수의회는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이필상 총장과 재

단에 직접 보내 직접 판단하게 하기

로 했다”며 “이는 교수의회가 해임건

의안을 진행시키지 않는 이상 총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필상 총장 ‘표절’

입장 표명 않기로

고려대 교수의회

고려대 교수의회는 2일 의원회의

를 열고 총장 표절에 대한 공식 입장

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교수의회의 배종대 의장은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이필상 총장과 재

단에 직접 보내 직접 판단하게 하기

로 했다”며 “이는 교수의회가 해임건

의안을 진행시키지 않는 이상 총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

이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의 적절

성 등을 철저히 째는 만큼 투기 등에

의한 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개발정보

사전유출에 따른 토지거래 상승, 부

동산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우려

해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지구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고려대 교수의회는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이필상 총장과 재

단에 직접 보내 직접 판단하게 하기

로 했다”며 “이는 교수의회가 해임건

의안을 진행시키지 않는 이상 총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

이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의 적절

성 등을 철저히 째는 만큼 투기 등에

의한 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개발정보

사전유출에 따른 토지거래 상승, 부

동산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우려

해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지구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고려대 교수의회는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이필상 총장과 재

단에 직접 보내 직접 판단하게 하기

로 했다”며 “이는 교수의회가 해임건

의안을 진행시키지 않는 이상 총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

이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의 적절

성 등을 철저히 째는 만큼 투기 등에

의한 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개발정보

사전유출에 따른 토지거래 상승, 부

동산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우려

해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지구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고려대 교수의회는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이필상 총장과 재

단에 직접 보내 직접 판단하게 하기

로 했다”며 “이는 교수의회가 해임건

의안을 진행시키지 않는 이상 총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

이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의 적절

성 등을 철저히 째는 만큼 투기 등에